

광주 보훈단체 '보조금 부적정 운용'

광주의 한 보훈단체가 수년 간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단체 지회장 A씨와 상근 직원 2명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체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4월에 A씨 등 3명의 보조금 부적정 운용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씨 등 집행부가 정산내역을 허위로 꾸며 빼돌린 보조금과 회원 친목모임 회비를 개인 계좌에 송금한 뒤 용처를

기소 중지 뒤 합의 시도·보조금은 삭감 단체 "운용상 일부의 문제...오해서 비롯"

알 수 없는 곳에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A씨 등 3명이 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친목모임 회비 등을 공금 계좌에 따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 계좌에 입·출금하며 공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한 집행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현재 기소 중지 상태에서 단체와 고소인 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에 대해 해당 보훈단체는 "공금 집행 내역을 부풀리거나 단체장 등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회원들을 위한 식사 제공·위문품 전달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금 결제가 저렴하거나 일시적으로 현금 용용이 필요할때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도입 이후

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관련 민원을 접수한 광주시는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운영비·사업비 명목으로 해당 단체에 매년 2800만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50% 삭감, 지난해부터 운영비 14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체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보조금 집행 내역까지 확인할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의혹이 인 만큼 일단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민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순천 공사장서 흙막이용 철제 펜스 붕괴

순천시의 한 공사장에서 흙막이용 펜스가 무너지면서 인근 주민센터의 시민 출입이 통제됐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순천시 조곡동주민센터 옆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터파기 공사 현장의 높이 2~3m 철제펜스가 10m 정도 무너졌다.

이 사고로 흙이 펜스와 함께 흘러내리면서 공사장과 맞붙어 있는 조곡동주민센터의 기초가 드러났으며, 시는 시민들의 주민센터 출입을 전면 통제시켰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주민센터의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 건물도 안전하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며, 일단 지반을 안정시키는 공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SNS서 만난 남녀 2명 죽고 2명 사라져

강원도 속초시 한 펜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성인 남녀 4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2명은 사건 현장에서 종적을 감추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54분께 속초시 A펜션에서 남자 B(27)씨와 여자 C(28)씨가 숨져 있는 것을 펜션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또 술병이 여러 병 있었고 사망 원인을 짐작케 하는 도구들이 흩어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녀 2명과 현장에서 사라진 남자 D(30)씨와 여자 E(23)씨 등 4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2차 일정으로 이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D·E씨 등 2명은 숨진 2명이 발견되기 전인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타고 온 차를 타고 펜션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펜션을 떠난 남녀 2명의 뒤를 쫓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사람들에게서 외상의 흔적과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이들이 서로 모른 상태에서 SNS를 통해 만나 펜션까지 오게 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주행 승용차, 택시와 충돌 3명 사망

14일 오전 0시40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숨졌다.

충돌 직후 택시 기사 A(58)씨와 승객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B(49)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0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음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27분께 부산의 한 빌라에서 A(36)씨 부부와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자 A씨의 집 배란다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숨겨 있던 아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 A씨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관할위반 신청서 제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시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의 관할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영)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호서와 함께 관할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관할위반이라는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관할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리 절차는 중단된다.

전 씨가 법정에 섰던 당일 변호인은 전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를 밝히기 전 이 재판의 관할위반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할위반이 아니라는 자신의 판단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며 관할위반 여부를 다시한 번 검토해 보자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사실상 광주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전 씨가 기소된 직후 그의 변호인은 재판 이송신청을 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할을 이 전해 달라며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게 맞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증거 및 쟁점 정리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이다.



자전거 운전 면허시험 받아요 서울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청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운전 면허 시험'을 받고 있다.

보수단체 광주서 잇단 집회...5월 단체 "차분히 대응"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을 헬기시격을 전면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침착한 대응을 강조했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 동구 광주지법 인근 모 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는 전두환씨를 향해 법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친 것을 놓고 학교 측에 항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단체는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가량 5·18 유공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리홍

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이 동구 금남로 4가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집회를 연다.

전씨의 재판 출석 이후 일부 보수단체 유튜브 채널 등에서 '광주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보수단체보다 앞서, 관할 경찰서에 한달 간 5·18민주광장 내 집회계획을 신고하기도 했다.

5월 단체는 격양된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통탄할 일이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민주·평화의 5월 정신을 받은 시민들이 보수집회와의 직접 충돌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보수단체의 잇단 만행을 보면서

5·18 역사왜곡이 더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헌법 상 기본권이다'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광주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단체 집회는 5월의 아픔이 39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광주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간존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초등학교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잣대에 맞춰 아이들을 재단 압박하는 행태로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남규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